

# 대손금 관련 Q&A

— 국세청, 2023. 2

## 1 대손 가능 채권의 범위

### 사례 1-1 대손금의 개념

- 대손금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객관적 사유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에 해당합니다.
- 또한 기업들 사이에 채무보증으로 인한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경영을 규제하고자 채무보증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가능 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사례 1-2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여부?

- 상거래 또는 상거래 외 활동으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이는 손비에 해당하나, 채무보증에 대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법법 제19조의2②).

#### (1) 채무보증 구상채권

-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며, 아래와 같이 그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구상채권은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 ② 은행 등 금융기관,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등이 행한 채무보증



-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④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세법상 제재목적으로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더라도 대손금으로 불인정합니다.
- 이 때 특수관계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 1-3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손 가능한지?**

- 특수관계인에 채권이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대손 가능한 채권입니다.  
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검토는 필요합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대손 가능성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 해석법인-0554, 2015.10.05.)

**사례 1-4 업무무관가지급금이 특수관계 소멸 후, 대손 사유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하고,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권의 처분손실 또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법 제19조의2②).

**사례 1-5 대여 당시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특수 관계가 성립된 후에 미회수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특

수관계인 여부 판단은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 당시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은 그 후 해당 채무자가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소정의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사례 1-6 채권 포기 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면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별한 사정 없이, 특수관계자 외 거래상대방인 채무자와 합의하여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포기·면제한 경우라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그 이익을 분여한 것이고,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법인기본통칙 19의 2-19의 2...5).

#### 사례 1-7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금액도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 대손금의 조기 회수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채권 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합니다(법인통칙 19의 2-19의 2...5 단서).
  - (정당한 사유)
    - ①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서이46012-11171, 2002.06.07)
    - ②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법규법인 2011-0484, 2011.12.19.)
    - ③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등 (법인46012-1045 , 2000.04.27., 서면-2016-법인-4986, 2016.12.15.)
- 원고가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원고가 상당한 손실을 예상감수하고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12.15. 선고 2020누55499 판결)



### 사례 1-8 채권포기금액은 무조건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 채권 포기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한도가 있는 손비인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권포기액은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게 됩니다.
  -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따라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로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채권이고, 해당 채무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공익법인이라면 손금에 산입 가능한 "기부금"에 해당할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 사례 1-9 채권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명이 필요한지?

- 외상매출금등 상거래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한도 시부인 대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15-법인-1241, 2015.07.21.).

### 사례 1-10 매출채권을 회수할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손금은?

-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출채권 중 수령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상대방의 지급거절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 면제받은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출채권 중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866, 2009.7.29.)

- 보험회사로부터 매출채권손실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방문상담3팀-280, 2008.02.05.)

### 사례 1-1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받지 않았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령 제19조 제8호).
- 납세자는 아래 ①과 ②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
  - 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세액공제 먼저 받고, 잔여 채권을 대손처리 하는 방법

## 2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사례 2-1 대손금(회수불능채권)의 손금 산입 사업연도는?

- 법인세법에서는 강제 대손사유와 임의 대손사유로 각 구분하여, 강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임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법인령 제19조의2①·③).
- 강제 대손사유는 채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면책되는 사유들로 규정되어 있고
- 임의 대손사유는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기 곤란한 사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강제 대손사유

- 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③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④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⑥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으로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⑦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2. 임의 대손사유

- ① 해외 물품(용역) 채권 중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③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다만, 특수관계 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⑥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⑦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
- ⑧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대손 승인기준에 해당하는 채권

### 사례 2-2 거래처 폐업, 부도어음 등 임의 대손사유는 경정청구 못하는지?

- 임의 대손 사유는 대손 사유가 발생하고, 회계장부에 비용 계상한 경우 해당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등 강제 대손 사유 발생하는 경우 그 강제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령 제19조의2③).

### 사례 2-3 2020년도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2022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2020년도에 채권 자체가 소멸했으므로, 2022년도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채권(자산)을 제각하는 회계처리를 빠뜨렸을 뿐입니다.
- ◆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그 후의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 46011-21388, 2000.11.30.)
-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법인세법 시행령」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

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  
인-2289, 2017.11.30.)

#### 사례 2-4 19년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손비처리 못했는데, 비용 인정 못 받는지?

- 19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법인세과-1689, 2008.07.23.)

#### 사례 2-5 대손요건 불충족으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이 그 후 임의 대손 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 가능한지?

- 대손금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유보)된 채권은 그 후 사업연도에 파산, 사업의 폐지 등 임의 대손 사유 발생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법상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 2019.03.28.)

### 3 대손사유: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사례 3-1 외상매출금등 채권의 소멸시효란?

-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에 대한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는바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 소멸시효 규정은 주로 상법과 민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민법이나 상법, 어음법 등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소멸시효 관련 규정들 아래와 같습니다.

### 사례 3-2 매출채권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 매출채권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하는 것임(법인 22601-3329, 1987.12.11.)
-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당해 매출 거래의 발생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7, 2004.06.22.)

### 사례 3-3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 소멸시효 진행 중에 ①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 등)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등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68조).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서면-2018-법인-1893, 2018.09.14.)

### 사례 3-4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 내용증명이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면 소멸시효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개인이나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내용증명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가지려면)
    -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최고"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소송 외적인 의사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6개월 이내에 압류, 가압류, 민사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이 나타납니다.

### 사례 3-5 매출채권 소멸시효를 민법상 3년과 상법상 5년 중 선택 적용 가능한지?

-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3년 또는 1년이 적용되는 경우, 상법상 시효 5년은 배제됩니다. 따라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 민법상 3년 단기 소멸시효 적용되는 상사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심 2005부1853, 2005.08.17.)

### 사례 3-6 공증을 하면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에서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으로 되는지?

- 외상매출금등을 공증을 받더라도 이는 판결 등 효력이 없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매출채권을 공증한다는 표현은 통상 매출채권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를 "준소비대차계약"이라고 부릅니다.
- 준소비대차란 원래 소비대차가 아닌 것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것으로,
-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매출채권을 준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했다하여 상거래 외 민사상 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상사채권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또는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이 될 것입니다.
- 다만 사례 3-7과 같이 채무승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3-7 공증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 되는지?

- 매출채권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서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발행은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으므로 시효는 중단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사례 3-8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승인'이란 무엇인지?**

- '승인'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승인은 시효완성 전에 하는 것입니다.
  - (방법) 승인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예시)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 (판례)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경우. 그것은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해 승인을 한 것으로서 그 채무 전부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사례 3-9 하도급 대가로 지급한 선금금의 소멸시효는?**

- 건설공사 선금금의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이므로 5년입니다.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선금금 채권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5년)를 적용하는 것임(법원46012-202,2001.01.26.)
  - 해당 선금금은 건설업자(상인)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금전이기 때문에 선금금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대여금채권(소멸시효 10년)에는 해당하지 않음

**사례 3-10 일부 채권만 변제받았을 때, 잔여 채권들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금이 가능한지?**

-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모든 잔여채무에 대하여 승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기산됩니다.
- 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인 해당 거래처가 거래 종료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기존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서 변제 후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 2017.06.07.)

## 사례 3-11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한 경우  
어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금 가능한지?**

-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각각 병존하게 되어,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법에 따라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내국법인은 매출채권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채권은 회수불능채권이 아닙니다.
-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 2019.10.17.)

## 사례 3-12

**세무사의 직무채권이 민법상 단기소멸 3년인지?**

- 세무사의 직무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세무사의 직무채권이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세무사는 상법상 상인이 아니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 제5호를유추적용할 수 없고,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임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 판결)

## 4

**대손사유: 회생등 면책채권**

## 사례 4-1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 회생은 기업의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클 경우, 기업이 영업을 계속하여 채무를 상환하게 하는 제도이며, 파산은 계속 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배당하는 절차임
-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중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회생 절차가 개시될 것입니다.

**사례 4-2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면책된 채권의 확인방법은?**

-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또는 회생계획인가 공고(대법원 공고/회생·파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4-3****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 회생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취득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를 대손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법인령 제72조② 제4의2호 단서).
- 다만 부가가치세법상은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를 대손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부가령 제87조①제2호).

**사례 4-4****회생인가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에 미달할 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법인세의 손금은 왜 안 되는지?**

- 기업회생제도는 채무자인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시켜 기업 회생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 또한 기업 회생을 돕기 위하여 회생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고, 채권자에게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손실을 즉시 인식하지 않고 처분시점까지 이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소비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2019.2.12.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8, 2022.07.07.)

## 사례 4-5

###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무상감자되는 경우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 출자전환된 주식 전량이 감소된다면 그 손실을 인식할 수 있으나, 출자전환 주식의 일부가 무상감자 되는 경우 손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0861, 2015.09.30.)
-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10-059, 2010.04.22.)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함 (법규법인2012-476, 2013.01.24.)

## 사례 4-6

###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분할 상환받는 채권을 조기 회수 조건으로 할인해 주는 금원은 대손금이 될 수 있는지?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분할 상환받는 채권을 조기 변제받으면서,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10년간 분할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에 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 [법령해석과-1660], 2019.06.27.)

## 사례 4-7

### 동일 사업연도에 부도발생 후 회생계획인가결정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거래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같은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분할 상환 받게 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동일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일부 채권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은 현금으로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의한 사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4, 2016.09.07.)

## 5

## 대손사유: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

## 사례 5-1 모든 기업, 모든 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만 경과하면 대손금이 되는지?

- 비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거래 채권 외 일반 민사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거래 채권만을 대상으로 함에 유의할 것(법인령 제19조의2①제9의2호)

## 사례 5-2

## 법률 신설 전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020년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 규정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전에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했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2020년도 이후 손비로 계상하는 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이하 "개정규정")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

## 사례 5-3 회수기일이 변경되면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수기일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을 기산하면 됩니다.

(거래내용) 상품을 20. 1. 20. 판매하고, 그 외상대는 20. 2. 28. 받기로 함  
 그 후 거래처의 자금 사정으로 외상대를 20. 12. 31. 받기로 약정함  
 (회수기일) 변경기일 20. 12. 31. ⇨ 2년 지난 날 ⇨ 23. 1. 1. (초일 불산입)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 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 -2020-법인-4044, 2020.11.30.)

#### 사례 5-4

**18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인데,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으로 22년도에 손비에 산입해도 되는지?**

- 22년도 손비가 될 수 없으며, 18년도 대손금으로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동 사안에 대하여 22년도 손비 가능하며,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직원들의 답변은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소멸한 채권을 다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손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고).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 -2020-법인-5988, 2021.01.29.)
-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서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고 주장하지 않은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음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 사례 5-5

**회수기일 2년 경과 대손규정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지?**

-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 2020.10.21.)



## 사례 5-6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여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으로 대손금 인식해도 되는지?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 6

## 대손사유: 파산, 강제집행, 사업폐지, 사망 등

## 사례 6-1

파산과 청산은 어떻게 다른지?

- 파산은 채무초과 등으로 계속기업가치가 하락하여 재산을 정리하여 환가 및 배당하는 절차이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청산은 파산의 원인(채무 초과, 지급불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며, 청산인이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 사례 6-2

파산에 따른 대손 가능 시기는 언제인지?

- 파산으로 인한 대손 가능시기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어 그 배당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배당표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파산종결(파산폐지) 공고일 이전이라도 관계서류에 의하여 선순위 채권 과다 사유 등으로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때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통칙 19의 2-19의 2...1)
-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함 (대법원/공고/회생·파산)
- (파산절차)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자 집회 ⇨ 채권조사 ⇨ 환가·배당 ⇨ 파산종결(파산폐지) 결정

## 사례 6-3

파산 선고일을 대손확정 시기로 볼 수 있는지?

- 채권 회수 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파산 선고일을 대손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배당표가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반드시 배당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할 금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면 대손금으로 인정가능합니다.

-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544, 2012.5.16.)

#### 사례 6-4

#### 사업자등록상 폐업된 거래처에 대하여 '사업폐지' 사유로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해도 되는지?

- 사업자등록 폐업여부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계속 수입금액, 소유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면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업의 폐지"란 사실상 채무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해산 및 청산법인이고 회수할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다면 대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산입가능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2, 2019.03.08.)

#### 사례 6-5

#### 외상대를 갚지 않고 거래처인 개인사업자가 사망했을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해도 되는지?

- 사망했다고 하여, 바로 대손금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살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7

## 대손사유: 해외 매출채권등

## 사례 7-1

**해외 매출채권도 상법상 소멸시효나 임의 대손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이 가능  
한지?**

-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다른 대손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채권 회수불능확인서 : 2019.2.12. 삭제되었다가 2021. 2. 17. 다시 대손사유로 추가됨

-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해외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2018.06.29.)

## 사례 7-2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이란 무엇인지?**

- 수출채권 또는 외국 용역 매출채권 중 한국무역공사로부터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 받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①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신청서와 증빙자료 첨부하여 한국무역공사 제출
- ② 증빙자료 확인 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

- (확인 요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해외채권 회수불능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음

- ①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 ②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 ③ 채무자의 인수거절·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검사

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8 기타 대손 관련 쟁점

### 사례 8-1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횡령금 회수 포기) 사용인(종업원 등) 횡령금액에 대해 제반 법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의 채권포기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 이익을 가져간 종업원에게 '상여'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횡령금 회수노력) 종업원 횡령금액에 민·형사상 제반 법률조치를 모두 취했으나 채무자(횡령한 사람)의 무재산 등으로 반환받지 못했다면 동 횡령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횡령한 사용인 입장에서는 반환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종업원의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통칙 19의 2-19의 2…6)
-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서면2팀-84, 2004. 1. 27.)

### 사례 8-2 지배주주인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법인을 실질 지배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지배주주 등이 자금유용 또는 횡령 행위는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입니다.
- 대표이사는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1.11.30. 선고 2011누19965 판결)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 사례 8-3 대손금의 객관적 입증서류란?

- 법인은 대손금을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서류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주요 입증서류들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입증서류]

- ① (세금) 계산서, 거래내용 기재 회계장부
- ②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급(매매) · 도급계약서, 약정서, 거래명세표, 송장, 물품 인수 확인서
  - 이동이 필요한 재화인 경우, 운송 관련 자료 (택배 또는 물류회사 운송장 등)
- ③ 용역의 제공완료 또는 기성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내용증명 (필수 서류 아님)

#### <사업의 폐지, 무재산등 입증자료 예시>

- ⑤ 기업 내부의 채무자 조사 보고서 (대표자 또는 관련 부서 책임자 결재)
  - 공부상 확인 가능한 부동산 · 동산 조사
  -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계속 수입 발생 여부
  - 그 밖의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 그 외 무재산 등으로 해당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
- ⑥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보고서 (필요한 경우)
- ⑦ 기타 대손 사유별 입증자료

## 〈대손 사유별 입증자료 예시〉

대손사유	입증 자료
소멸시효 완성 회수기일 경과채권 - 2년,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일, 용역 제공 완료일 확인가능 서류</li> <li>대금 청구내역 확인 서류</li> <li>소멸시효 중단 관련 입증자료</li> </ul>
회생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생계획인가 결정문</li> </ul>
파산, 강제집행(경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권배분계산서</li> <li>강제집행불능조서</li> </ul>
해외 용역(수출)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무역보험공사 발급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li> </ul>
사망·실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정승인, 상속포기, 실종선고)가정법원 판결문</li> <li>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필요시 가계도</li> </ul>
부도어음·수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도어음 원본, 거절증서 등</li> <li>부도사실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어음 : 금융결제원 - 어음교환업무 - 전자어음 (<a href="http://www.unote.kr">www.unote.kr</a>)</li> <li>일반어음 : 금융결제원 - 어음교환업무 - 어음정보센터 (<a href="http://www.knote.kr">www.knote.kr</a>)</li> </ul> </li> </ul>
화해, 화해권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사조정·화해 조서 또는 결정서</li> </ul>